

보도자료

배포일 : 2023.3.3.(금)



□ 국민소통위원회 : ☎ 02-2630-0050 ☎ 02-2630-7094 □ 담당 : 이주형 부장

민주당, 채널A 보도 방심위 제소

- 채널A는 당헌 80조 신구조항을 읽어라도 봤는가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3월 3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채널A 뉴스A>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채널A 뉴스A> 3월 2일,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당직 두고...이재명 딜레마?] 보도에서 유승진 기자는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정치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라고 보도했다.

유승진 기자의 관련 멘트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서 언급된 ‘당헌 80조 3항’ 은 정치탄압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 3항을 수정한 부분은 정치탄압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다. 논의결과 민주당은 2022년 8월 26일 당헌 80조 3항을 수정, 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 에 올려 정치탄압여부 판단을 구하던 것에서 판단의 주체를 ‘당무위원회’ 로 바꾸었다.

채널A는 당헌 80조 3항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도한 것인가. 아니면 개정 내용을 알면서도 마치 없었던 정치탄압 인정 면죄부 조항을 새로 만든 것처럼 왜곡보도한

것인가.

채널A 유기자가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정당대회에서’ 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치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라고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알면서도 위 보도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의도된 가짜 뉴스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왜곡 음해에 다름 아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낸다면 누가 그걸 언론이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채널A 관련 보도를 방심위에 제소하는 한편 채널A와 유승진 기자에게 아래 질문을 하고 공개적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채널A와 유승진 기자는 민주당 당헌 80조 3항 신구 조항을 비교해 읽어보거나 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했는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낸 <채널A 뉴스A>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참고 1	당헌 80조 신규 조항
-------------	---------------------

현 행	개 정
당헌 제80조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p>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p> <p>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u></p> <p>④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p> <p>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u> <개정 2022.8.26.></p> <p>④,⑤ 현행과 같음</p>

참고 2	관련 방송심의 규정
-------------	-------------------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